

# 2023년 5월 6일 시행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령( I )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관계 법령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시행령 포함)
	민방위기본법(시행령 포함)
	예비군법(시행령 포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포함)

헌 법

## <정답공개 및 이의제기 안내>

1. 정답공개 일시 : 2023년 5월 8일(월) 15:00 이후
2. 정답공개 방법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알립니다』에 게시
3. 이의제기 기간 / 방법 : 홈페이지에 게시



## 법령 I -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관계 법령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시행령 포함)

문 1.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에는 비상사태와 관련되는 중기적 관점에서의 국내외 환경변화 분석 및 예측 외에도 비상대비계획의 작성 시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ㄴ. 실시계획은 시·도지사로부터 통보된 시행계획에 따라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작성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ㄷ. 국가정보원장은 인력자원과 물적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 훼손 및 유출을 방지하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ㄹ.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 소속 기관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게 그 업무 수행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2.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자원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준비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인력자원 또는 물적자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력자원 중에서 중점 관리하여야 할 인력을 지정할 수 있다.
- ③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비상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의 장에 대하여 자체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3개월분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게 할 수 있다.
- ④ 국무총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비상시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식품, 보건 및 금융에 관한 중점관리대상업체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문 3.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로부터의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 및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에게 참여 또는 사용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될 당시에 미리 그 참여 및 사용 협력에 동의를 받은 인력·물자를 대상으로 한다.
- ③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과 동의는 구두로 할 수 있다.
- ④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통합방위법」에 따라 통합방위사태가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을 중지해야 하지만,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주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을 연장할 수 있다.

문 4.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업무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둔 대통령 소속 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소속 비상대비업무담당자가 그 임무에 적합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해서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업체의 장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비상대비업무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심사 결과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고 있는 기관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비상대비업무심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문 7.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전국에 걸쳐서 비상대비훈련실시명령이 발령된 후의 훈련통지서 전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A도지사는 훈련통지서를 인력훈련통지서 또는 물적자원훈련통지서로 구분하여 발부한다.
- ② A도 B읍에 거주하는 훈련대상자 甲에게 인력훈련통지서가 교부되는 경우, 훈련을 갑자기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통지서는 훈련실시일 7일 전까지 교부되어야 한다.
- ③ A도 B읍에 거주하는 훈련대상자 乙에게 인력훈련통지서가 사전에 직접 교부되는 경우, 본인이 없으면 가족 중 다른 성년자 丙에게 교부하지 않고 미성년 자녀 丁에게 교부할 수 있다.
- ④ A도 B읍에 거주하는 훈련대상자 戊에게 인력훈련통지서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송달되는 경우, 본인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

문 8.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도상훈련의 훈련기간은 연(年)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 ㄴ. 시·도지사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훈련이 끝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훈련실시 결과를 보고하되,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훈련실시명령을 발령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해야 한다.
- ㄷ. 시·도지사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이 훈련대상자를 사용할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 직원을 인도·인수 장소에 출석시켜 훈련에 참가한 사람을 인도·인수하게 한 경우, 인도·인수 장소가 사용기관의 시설구역 안인 경우에는 사용기관에서 인도·인수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 ㄹ. 훈련은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 중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문 9.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보상 및 실비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비상대비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과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만을 적용하여 보상한다.
- ② 국유 또는 공유재산인 훈련대상물자가 비상대비훈련으로 훼손된 경우뿐만 아니라 유실된 경우에도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훈련실시기관이 군부대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은 그 소유권자에게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 ③ 비상대비훈련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자의 보상청구권은 손실을 입은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④ 동시관리훈련에 참가한 사람에게는 식비·숙박료·교통비 및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민방위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10. 민방위기본법령상 중앙민방위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외교부장관, 소방청장 및 경찰위원회위원장은 모두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위원이 된다.
- ㄴ. 중앙민방위협의회의 회의에는 연 2회 소집되는 정기회의와 민방위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비상회의가 있다.
- ㄷ. 분과위원회는 소관 민방위 기본 계획안 및 민방위 집행 계획안을 심사하며, 그 밖에 해당 분과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 ㄹ. 민방위에 관한 각 중앙관서 간의 업무를 조정하는 것과 민방위사태가 발생한 경우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은 중앙민방위협의회 관장 사항에 속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13. 다음 가상 사례에서 민방위기본법령상 甲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을 입어 장애판정을 받았다. 고용노동부에서 조사·공표하는 전년도 전체 산업체 월평균임금 총액은 400만 원이고, 통계청이 매년 조사·공표하는 도시가계비와 농가 가계비를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단위로 계산한 금액은 최근 3년간 변동 없이 12만 원이다. 甲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바가 없다.

- ① 甲이 장애등급 제5급의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받을 수 있는 장애 보상금은 7,200만 원이다.
- ② 甲이 임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사망 보상금은 1억 4,400만 원이다.
- ③ 甲이 장애등급 제3급의 장애판정을 받아 장애 보상금을 받은 후 그 장애로 말미암아 사망하였다면, 甲이 받을 수 있는 사망 보상금은 2,400만 원이다.
- ④ 甲이 부상의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면 그 기간 동안 휴업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50일이면 甲이 받을 수 있는 휴업 보상금은 600만 원이다.

문 14. 민방위기본법령상 협조 및 동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공공단체·사회단체, 그 밖의 민간 사업체의 장은 민방위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② 군부대의 장은 민방위사태가 그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경우 긴급히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동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동원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④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구두로 전달하는 동원 방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한다.

문 15. 「민방위기본법」상 민방위대의 편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은 통장.이장으로 하되, 민방위사태 발생 시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이 65세 이상의 고령 등의 사유로 현장 지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자를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으로 할 수 있다.
- ② 직장의 장이나 직장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가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이 된 경우, 민방위대의 대장이 예비군의 대원인 때에도 민방위대의 대장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비군인 민방위대의 대장에 대하여는 「예비군법」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동원과 훈련 의무를 면제한다.
- ③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은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표나 그 밖에 민방위 대원 편성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근거하여 편성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민방위대를 편성하며,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와 그 사유가 소멸된 자도 그 사실을 거주지의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기술지원대원을 선발하면 지체 없이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알려야 하며,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은 매년 민방위대를 편성한 후 소속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을 알려야 한다.

문 16. 민방위기본법령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상황은 민방위사태에 해당한다.
- ㄴ. 민방위대에 대한 정기검열은 시.도지사가 실시하고, 특별검열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 ㄷ. 관공서.공공기관 및 국가보안시설의 옥외에 설치된 출입구등을 비롯한 문전등의 경계관제 방법은 차광이다.
- ㄹ.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 훈련에 참여한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17.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신뢰성 확보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표준 및 기술기준을 제정·고시하여 적용하고 인증할 수 있는데,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에 대한 인증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받은 제품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된 인증기관이 인증업무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④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신청서에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여 견본품과 함께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신청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정·고시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문 18. 「민방위기본법」상 벌칙과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시·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본인을 갈음하여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 통지서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재난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도지사가 민방위대 동원을 명하였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자에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 ③ 전시·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이 민방위대 동원을 명하였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 ④ 「통합방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이 실시되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대장과 훈련 담당 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민방위 대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예비군법(시행령 포함)

문 19. 예비군법령상 비상근예비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방부장관은 평시에 연간 소집 기간이 30일 초과 180일 이내인 단기 비상근예비군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 ② 장기 비상근예비군의 정원은 안보환경, 군 구조 개편 정도, 상비 병력의 연차적 조정 규모 등을 고려하여 5,000명 이하의 범위에서 매년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 ③ 국방부장관은 정원에 미달하여 선발하는 경우가 아닌 한 비상근예비군의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연중 수시로 선발한다.
- ④ 입영부대장은 선발된 비상근예비군이 개인 사정으로 비상근예비군 소집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집을 중단할 수 있다.

문 20. 예비군법령상 예비군 동원 및 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국내 노선을 운행하는 항공기의 조종사 甲에 대하여는 동원을 보류할 수 있다.
- ㄴ. 국방부장관은 예비군대원인 국회의원 乙에 대하여는 동원을 보류할 수 있다. 한편, 乙은 연간 20일 한도에서 훈련하여야 한다.
- ㄷ. 국내 항구도시 A시에 동원명령 발령 당시, A시 해역 내 어장에 출어(出漁) 중인 어선에 승선하고 있던 丙은 동원명령 발령 후 48시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 ㄹ. 동원을 연기하려는 丁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구술로 동원 연기를 신청하였다면, 천재지변이 종료되었을 때 별도로 동원 연기원서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21. 예비군법령상 소집통지서의 전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때에는 사전에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하고 동원에 대비한 불시(不時) 훈련이나 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방문 통보의 방법으로 예비군대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 ②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을 때에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였고, 세대주는 이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였다. 이 경우 소집통지서는 예비군대원 본인이 세대주로부터 전달받은 때에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본다.
- ③ 예비군대원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에 대한 소집통지서 전달이 유효하려면 통지서 전달 전후와 무관하게 예비군대원으로부터 그 수령에 관한 동의를 받으면 된다.
- ④ 예비군대원이 수임군부대의 장이 공시한 훈련(훈련소집일 : 2023년 4월 24일, 월요일)을 받겠다는 의사를 2023년 4월 19일에 전자문서로 통지한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집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전달한 것으로 본다.

문 22.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무장 및 탄약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무장을 위한 무기.탄약.장비 및 그 밖의 부속품 등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군부대의 장이 수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무를 경찰서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나, 경찰서장은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 ②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업무의 지원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동한 예비군대원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 ③ 군부대의 장은 예비군의 무장을 위한 무기.탄약 장비와 그 밖의 부속품 등을 수임군부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분리.보관할 수 있다.
- ④ 무장 소요(騷擾)가 있는 지역에서 중요시설의 경비 임무를 수행하는 예비군대원은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중요시설을 경비할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문 23. 예비군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예비군대원 甲은 동원되어 임무수행 중에 5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은 후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았다.
- 甲은 부상으로 인하여 5개월 동안 생업인 슈퍼마켓 운영을 하지 못하였다.
- 甲은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2년 6개월 뒤에 해당 상이(傷痍) 후 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 ① 사망한 甲에 대하여는 이미 지급한 장애보상금을 공제하지 않은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 ② 甲에게 지급하는 휴업 보상금의 금액은 통계청이 해마다 조사·공표하는 전년도 전국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지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③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甲은 본인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에게 치료로 인하여 휴업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④ 휴업 보상금의 지급청구서를 받은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甲의 휴업 사실과 진료 기록부 등을 확인한 후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휴업 보상금의 지급청구서를 보내야 하고, 휴업 보상금의 지급청구서를 받은 수임군부대의 장은 휴업 보상금의 지급액을 결정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문 24. 예비군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충청남도 X시 지역에 동원명령이 발동되어 X시 지역에 거주하던 예비군대원 甲과 乙도 동원이 되었다.

- (1) 예비군대원 甲은 동원되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었다.
- (2) 예비군대원 乙은 동원되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임무수행 중 사망하였다.

— <보 기> —

- ㄱ. 예비군대원인 甲은 국공립 병원, 보건소, 민간의료시설뿐만 아니라 군(軍)의 의료시설에서도 치료받을 수 있다.
- ㄴ.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은 甲이 아직 치료비용을 민간의료시설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甲은 본인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에게 치료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 ㄷ. 乙과 관련해서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乙의 유족이 보상 대상자가 된다.
- ㄹ. 수임군부대의 장은 乙에 대한 사망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휘 계통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25. 예비군법령상 예비군부대 지휘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甲은 「형법」상 절도죄를 범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6개월이 경과하였다면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될 수 있다.
- ②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乙은 소속 예비군대원 X를 상대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반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丙은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를 반복적으로 Y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3호)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021년 4월 7일에 그 형이 확정되었다면, 2023년 4월 7일에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될 수 있다.
- ④ 동원된 예비군대원 Z뿐만 아니라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丁에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과 그 밖의 실비(實費) 변상을 할 수 있다.

문 26. 「예비군법」에 규정된 위반행위와 벌칙이 일치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전시에 동원을 기피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 ㄴ. 동원된 예비군대원이 무장공비와 교전 중에 분대장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종하였을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 ㄷ.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된 대학생에 대하여 소속 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ㄹ. 예비군의 장비를 보관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과실로 이를 분실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ㅁ.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을 받은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① ㄴ, ㄹ

② ㄷ, ㅁ

③ ㄱ, ㄷ, ㅁ

④ ㄱ, ㄹ, 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2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조정위원회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에 상정될 안전을 사전에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을 심의한다.
- ㄴ.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무총리로부터 통보받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해 작성한 집행계획의 심의도 포함된다.
- ㄷ. 조정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위원으로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임명할 수 있다.
- ㄹ.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문 2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수습지원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국내 또는 해외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대규모재난의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수습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 ②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따로 수습지원단을 구성하지 아니하고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제구조대로 갈음할 수 있다.
- ③ 수습지원단의 업무에는 지역대책본부장에 대하여 재난수습을 위한 재난 현장 상황, 재난발생의 원인, 행정적·재정적으로 조치할 사항 및 진행 상황 등에 관한 보고가 포함된다.
- ④ 중앙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상황의 파악, 현장 지도·관리 등을 위하여 수습지원단을 현지에 파견하기 전에 중앙대책본부 소속 직원을 재난 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문 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동남아시아 A국에서 댐붕괴사고로 인해 대규모 홍수가 발생하여 대한민국 재외공관장 甲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마침 현지 재난지역에 체류 중이던 대한민국 국민 乙의 생사확인이 불명하여 정부차원의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 <보 기> —

- ㄱ. 이 경우, 외교부장관이 중앙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ㄴ. 甲은 즉시 위 상황을 대한민국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교부장관은 지체 없이 乙의 생사확인 등 안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ㄷ. 외교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乙의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ㄹ. 乙의 며느리 丙은 乙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는 않아도 외교부장관에게 乙의 생사확인 등 안전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문 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극심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게 된 재난에 대한 응급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선포한 재난사태인 경우에도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비상소집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한 재난사태에 대해서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나 재난으로 인한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없어진 경우에는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 ③ 다수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관련되는 재난상황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 ④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경계경보를 발령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문 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2023년 6월 19일부터 6월 23일까지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참여하는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려고 한다. 이에 A사단장은 위 합동재난대비훈련에 참여하려고 한다.

— <보 기> —

- ㄱ.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참여하는 재난대비훈련(위기관리 매뉴얼의 숙달훈련은 제외한다)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ㄴ. A사단장이 합동재난대비훈련에 참여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부담할 수 있다.
- ㄷ.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대비훈련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A사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ㄹ. A사단장은 재난대비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① ㄱ, ㄴ    | ② ㄷ, ㄹ    |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

문 3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긴급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난현장에서의 긴급구조활동은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 지휘하되, 치안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소속 긴급구조요원을 신속히 출동시켜 필요한 긴급구조활동을 하게 하거나,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장비의 배치 및 긴급구조에 필요한 물자관리에 관하여 지휘할 수 있다.
- ③ 항공기 조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방청장이 항공기의 수색과 인명구조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때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국방부장관은 항공기나 선박의 조난사고가 발생하면 긴급구조업무에 책임이 있는 기관의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군의 지원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탐색구조부대를 지정하고 출동대기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문 3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A시 B지역에 강력한 대설 및 한파로 인하여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생긴 재난이 발생하였다.

— <보 기> —

- 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B지역의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피해조사를 마치면 지체없이 자체 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ㄷ. 중앙대책본부장이 B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경우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ㄹ. B지역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경우, A시의 시장은 A시의 피해상황을 종합하는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한 후 수습본부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ㅁ. B지역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은 복구를 실시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복구계획을 확정할 수 있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문 3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안전문화의 진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무총리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한 안전관리헌장을 제정·고시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정보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공개하는 시설 등에 대한 각종 안전점검·진단 등의 결과를 통합적으로 공개하기 위하여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를 개발·조사할 수 있으며, 이때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에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개최일 3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문 3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관리기금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은 그 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하고,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해당 연도의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21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ㄴ. 행정안전부장관은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커서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하게 된 재난의 경우에는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을 편성하고, 이를 현지에 파견하여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ㄷ.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의 재난원인조사 결과를 신속히 국회의장에게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 ㄹ.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책임관 및 담당직원을 임명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의 장이 안전책임관을 임명 또는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 법령 I - 헌법

문 1.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3호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은 일반 국민에 비해 특별히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는 골프장 부가금 징수 대상 시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초래하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 ㄴ. 의료인인 청구인이 지인을 소개하는 기존 환자에게 자신의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 혜택을 1회 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제공하겠다는 포스터를 게시한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ㄷ. 혼인한 등록의무자 모두 배우자가 아닌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공직자윤리법」 조항에 따라 이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부칙 제2조는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 ㄹ. 선거일 이전에 행하여진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을 ‘당해 선거일후’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본문 중 ‘당해 선거일후’ 부분은 선거일 이전에 행하여진 선거범죄와 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선거범죄, 선거범죄와 다른 일반 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일을 각각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문 2.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전문 중 ‘관계인은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분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ㄴ. 행정소송에 관하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만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가운데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본문 중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ㄷ. 공공단체인 한국과학기술원의 총장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 중 ‘교원,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에 관한 부분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합리적 이유 없이 부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 ㄹ. ‘피고인인 공탁자’가 형사공탁을 할 때 ‘피해자인 피공탁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공탁규칙」 제20조 제2항 제5호 중 ‘피고인인 공탁자’에 관한 부분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ㄹ  
 ④ ㄱ, ㄴ, ㄷ, ㄹ

문 3.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도록 하는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본문 중 ‘설치·관리하려는 자’ 부분
- ② 청원주로 하여금 청원경찰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
- ③ 초·중등학교의 교육공무원이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교육공무원 가운데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은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부분
- ④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로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률상 요구되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3 제1항 제6호 중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누출한 경우로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 중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 부분

문 4. 국무위원과 국무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 ② 국무회의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회의 의장과 국무회의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정부조직법」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은 남북관계발전에관한기본계획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 ④ 국회와 국무총리 모두 국무위원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가지고 있다.

문 5. 종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청구인인 구치소장이 2009년 6월 1일부터 2009년 10월 8일까지 구치소 내에서 실시하는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미결수용자인 청구인의 참석을 금지한 행위는 종교행사 등 참석불허 처우로 얻어질 공익의 정도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미결수용자들이 종교행사 등에 참석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종교의 자유의 제한이라는 불이익에 비하여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종교행사 참석불허 처우는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
- ② 금치기간 중 공동행사 참가를 정지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4호에 관한 부분에 따라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은 최장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동행사에 참가할 수 없으나, 종교상담을 통해 종교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금치조항 중 제108조 제4호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③ 피청구인인 구치소장이 2012년 12월 21일부터 2013년 4월 5일까지 구치소 내 미결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개신교 종교행사를 4주에 1회, 일요일이 아닌 요일에 실시한 행위의 경우 종교행사 처우로 얻을 수 있는 공익은 구치소의 안전과 질서 유지 및 종교집회의 원활한 진행으로서 이러한 공익은 청구인에게 매주 1회, 일요일에 종교집회의 참석이 보장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이 입게 되는 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④ 피청구인인 구치소장이 미결수용자의 신분으로 구치소에 수용되었던 기간 중 청구인의 조사수용 내지 징벌(금치)집행 중이었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 및 미지정 수형자(추가 사건이 진행 중인 자 등)의 신분으로 수용되어 있던 기간 동안, 교정시설 안에서 매주 화요일에 실시하는 종교집회 참석을 제한한 행위는 피청구인이 원칙적으로 수형자를 대상으로 종교집회를 실시하는 것에는 나름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미결수용자인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



문 6. 공무담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성년후견인인 국가공무원은 당연퇴직한다고 정한 구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중 제33조 제1호 가운데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부분은 피성년후견인이 된 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②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연구사 선발에 수석교사가 응시할 수 없도록 응시 자격을 제한한 교육부장관의 ‘2017년도 교육전문직 선발 계획 공고’, ‘2017년도 교육부 및 소속기관 근무 교육전문직 선발 계획’은 「교육공무원법」 제9조 [별표 1]에 근거한 것으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③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 ④ 경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3,0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고 후보자등록신청 시 기탁금납부영수증을 제출하도록 정한 ‘경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제20조 제1항 및 제26조 제2항 제7호는 후보자인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문 7. 법원의 조직과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법관회의에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대법원은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중심으로 심판한다.
- ④ 우리나라의 영토 내에서 행하여진 외국의 사법적(私法的) 행위가 주권적 활동에 속하는 것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가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 8.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정당에 관한 사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선거에 관한 사무,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행한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③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를 위하여 인원·장비의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는 지시 또는 협조 요구를, 공공단체 및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개표사무종사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한함)에 대하여는 협조 요구를 할 수 있다.
- ④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문 9. 대통령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으며,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 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 거주기간으로 본다.
-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7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 ③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하며,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 ④ 대통령선거에서 후보 난립을 방지하고 선거비용 중 일부를 예납하도록 하기 위한 기탁금 제도는 그 기탁금액이 과다하지 않는 한 헌법상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대통령선거에서 기탁금 3억원을 납부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문 10. 국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 ②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국회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으나,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47조에 따른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회의원 임기만료일 90일 전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 ③ 국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이나 본회의 상정 후에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는 그 심사를 위하여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④ 통치구조의 구성원리는 자기목적적인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수단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자유위임원칙 역시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국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불가피하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문 11.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 관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제1호 중 대규모점포에 관한 부분
- ②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도록 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단서
- ③ 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없이 보증서를 바탕으로 발급받은 확인서로써 단독으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
- ④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중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부분

- 문 12. 근로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상 근로의 권리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의미하는데,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인정되며, 건강한 작업 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
  - ②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즉 이른바 ‘초단시간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헌법 제32조 제3항에 위배되어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 ③ 헌법 제15조 직업의 자유와 제32조 근로의 권리는 국가에게 단지 사용자의 처분에 따른 직장 상실에 대하여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해 줄 의무를 지울 뿐이고, 여기에서 직장 상실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 ④ 근로자 4명 이하 사용 사업장에 적용될 「근로기준법」 조항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이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될 「근로기준법」 조항을 정하면서, 4명 이하 사업장에 부당해고제한조항이나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적용되는 조항으로 나열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 문 13. 헌법재판소의 심판 및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재판소는 종국결정이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과 관련이 있으면 그 결정서 등본을 국회로 송부하여야 한다. 국회의장은 송부된 결정서 등본을 해당 법률의 소관 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에 송부하고, 국회의장은 송부된 종국결정을 검토하여 소관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나,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③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으며, 대법원 외의 법원이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 ④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형벌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문 14.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고등학교 퇴학일부터 검정고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은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 제2호 본문 중 ‘고등학교’에 관한 부분은 고등학교를 자진 퇴학한 청구인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ㄴ.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중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항 수 기준 70%를 한국교육방송공사 교재와 연계하여 출제한다는 부분은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인 청구인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공부하여야 할지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제한한다.
- ㄷ. 헌법 제31조 제3항의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의무교육 비용을 학령아동의 보호자 개개인의 직접적 부담에서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일 뿐, 의무교육의 비용을 오로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해결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ㄹ.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인 경기도의 학교 설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무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달리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서 유아원부터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관한 사무에 한하여 이를 자치사무로 보아야 할 것이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문 15. 헌법상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1962년 제5차 개정 헌법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한다. 각인의 경제상의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라고 명시하여 헌법상 경제질서의 원리에 관하여 사회정의의 실현을 기본으로 삼고 개인의 경제적 자유는 부차적인 것으로 규정하였다.
- ② 현행 헌법상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 ③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이념은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로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다.
- ④ 헌법이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운동에도 헌법적 허용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이상,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한계를 넘어선 소비자 불매운동 역시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정당행위 기타 다른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한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 할 수 있다.



## 응시자 주의사항

1.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나 시험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에 의거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2. 시험시작 즉시 문제 편철 순서, 문제누락 여부, 인쇄상태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를 주의 깊게 읽은 후,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정답만을 고르며, 문제내용에 관한 질문은 하실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관리관의 시험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제책은 시험종료 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